

현안과 과제

■ 제20대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Executive Summary

□ 제20대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 개요

지난 5월30일 출범한 제20대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국민들이 바라는 새 국회의 경제정책 방향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지난 6월초에 전국의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제20대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그 결과 국민 4명 중 3명(76%)은 새 국회의 정책 1순위로 경제 분야를 꼽았으며, 사회문화 (14%), 정치(6%), 통일안보(4%)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정책 중에서 특히 일자리 창출(38%)과 물가안정(20%) 의견이 높았으며, 경제민주화(9.3%)나 복지 확대(8.9%)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분배’(55.9%)에 대한 선호도가 ‘성장’(44.1%)보다 더 높았으며, ‘복지 확대’(75.3%) 의견이 ‘복지 축소 또는 유지’(24.7%) 의견에 비해 훨씬 더 많았다.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54%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증세’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숨어 있는 ‘세원의 발굴’ 등에 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복지를 위한 추가 세금 납부의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7%로서 아직 과반에 미달하고 있으며, 북유럽 복지국가(70% 이상)에 비하면 크게 낮은 편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전히 증세를 위한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경우에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과 노후 준비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비취업자’의 경우에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직업군이 고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시사점

국민들은 제20대 국회의 경제 정책에, 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층, ‘자영업자’, ‘비취업자’,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고용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배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국민들의 복지 체험을 늘림으로써 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정부의 복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과 재정 건전성 유지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1. 개요

- 지난 5월30일 출범한 제20대 국회는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과반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으므로 특정 정당이 독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3당 간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122석을 얻는 데 그쳤으며, 지난 6월 말 무소속 7인을 영입하여 129석이 되었지만 과반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침
 - 새누리당(129석)과 더민주당(122석)¹⁾ 사이에서 국민의당(38석)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3당 체제’가 형성되어 3당 간의 ‘협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새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새 국회가 정책 방향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 2016년 6월에 실시된 ‘새 국회 정책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되, 2012년 12월에 실시된 ‘새 정부 정책방향’에 관한 설문조사²⁾와 질문이 비슷한 경우에 한하여 비교하여 서술하기도 하였음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표본	20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성별	남성	50.7
	1,008명			여성	49.3
조사기간	2016.5.30 ~ 6.10		연령별	20대	22.9
설문방식	유선전화			30대	27.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0대	26.1
	±3.09%p			50대 이상	23.7
자산별	1억원 미만	24.9	지역별	서울	20.7
	3억원 미만	37.7		인천경기	27.3
	3억원 이상	37.3		충청전라제주강원	25.0
직업별	정규직	53.8	소득별	영남	27.0
	비정규직	19.7		~299만원	22.6
	자영업자	9.6	~499만원	36.9	
	비취업자	16.9	500만원 이상	40.5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1) 더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123석을 얻었으나, 더민주당 소속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후 관례에 따라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면서 의석이 122석으로 줄었음.
 2) 현대경제연구원(2013.1.25),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참조.

2. 제20대 국회의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① (정책우선순위) 2016년 6월 현재 우리 국민의 3/4정도(76%)는 정책 1순위로 경제 분야를 꼽음

- 전체 : 국민들은 새 국회가 경제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기를 원함
 - “귀하께서는 새 국회가 어떤 분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경제가 76.0%로 압도적이었으며, 사회문화는 14.1%, 정치는 6.0%, 통일외교안보는 4.0%를 기록해 2012년 말 조사 결과와 비슷함
- 연령별 :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는 경제 분야 응답률이 67.1%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사회문화 분야는 20.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는 기혼 비율이 낮고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경제 부담이 적고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정책우선순위 >



< 경제분야 우선 비율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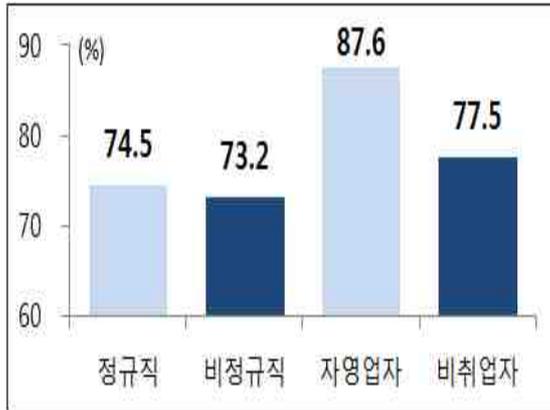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직업별 : 자영업자의 경우 경제 분야를 정책 1순위로 꼽는 비율이 87.6%로서 다른 직업 유형에 비해 매우 높으며, 2012년 말(76.4%)에 비해서도 크게 상승
 - 자영업자의 경우 2013~2016년에 내수부진³⁾과 자영업자 간 출혈경쟁으로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3) 2013~2015년에 GDP증가율이 2.9%, 2.3%, 2.6%로 저성장 기조 지속.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이 각각 1.9%, 1.7%, 2.2%로 낮은 수준 지속.

- 기타 성별, 소득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경제분야 우선 비율 : 직업별 >



< 경제분야 우선 비율 : 소득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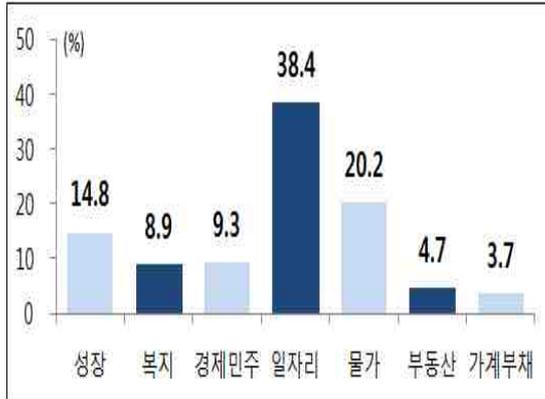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주 : 비취업자는 전업주부, 학생, 무직자 등 취업자가 아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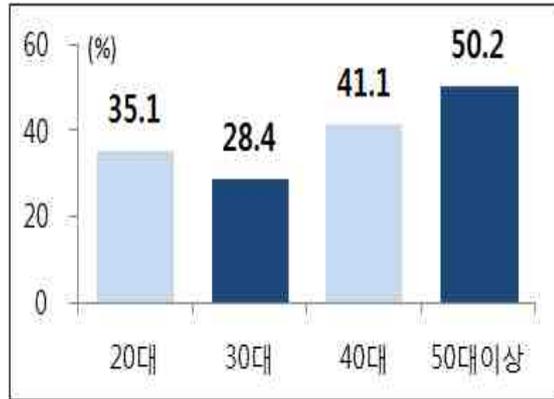
② (경제정책 우선순위) 새 국회에 바라는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창출 (38.4%)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물가(20.2%), 성장(14.8%)의 순이었음

- 전체 : 국민들은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일자리창출'이라고 응답
 - "다음 경제정책 중에서 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일자리창출'이라는 응답이 38.4%에 달했으며, 2012년 말 조사의 26.5%에 비해 크게 상승함
 - 다음으로, 물가안정은 20.2%로서, 2012년 말 조사의 31.2%보다 하락함
 - 이어서, 경제성장 14.8%, 경제민주화 9.3%, 복지확대 8.9%, 부동산활성화 4.7%, 가계부채 연착륙 3.7%로 나타남
 - 2013~2016년에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물가 부담은 완화된 반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요구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령별 : 50대 이상에서 일자리창출을 경제정책 1순위로 꼽는 비율이 50.2%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2012년 말의 29.0%에 비해 크게 상승
 -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됨. 노후준비가 미흡하고 은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일자리')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에 때문.

< 경제정책 우선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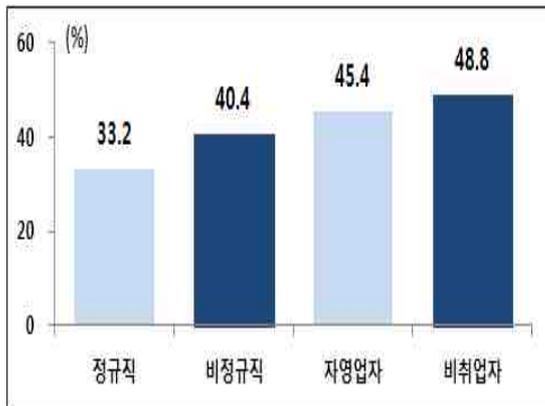
< 일자리정책 우선 비율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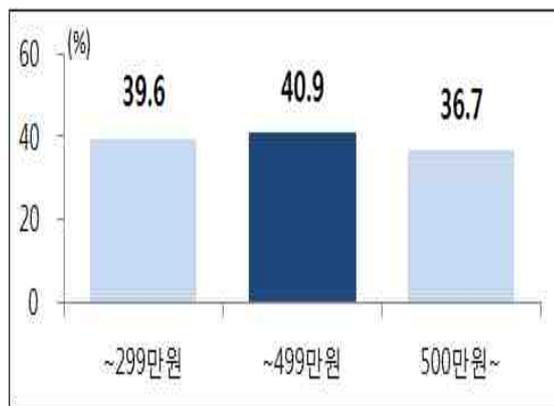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직업별** : 자영업자와 '비취업자'(전업주부, 학생, 무직자 등)의 경우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꼽은 비율이 각각 45.4%, 48.8%로 평균(38.4%)보다 높았으며, 지난 2012년 말의 조사에 비해 '일자리' 응답률이 크게 상승함
 - 이와 같은 변화는 2013~2016년에 내수부진⁴⁾과 자영업자 간 출혈경쟁으로 폐업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자영업자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요구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 비취업자(전업주부, 학생, 무직자)의 일자리창출 선호도가 상승한다는 것은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노동시장 여건이 조성될 경우 노동시장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기타 성별, 소득별로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물가안정 선호도가 줄고 일자리 창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정책 우선 비율 : 직업별 >



< 일자리정책 우선 비율 : 소득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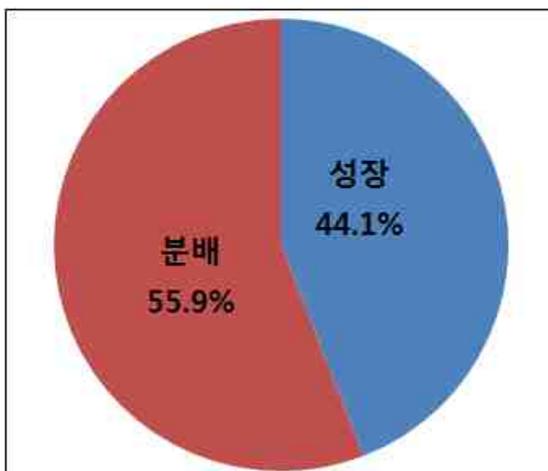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4) 2013~2015년에 GDP증가율이 2.9%, 2.3%, 2.6%로 저성장 기조 지속.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이 각각 1.9%, 1.7%, 2.2%로 낮은 수준 지속.

③ (성장-분배) 제20대 국회에서는 ‘분배’(55.9%)에 대한 요구가 ‘성장’(44.1%)에 대한 요구보다 더 높게 나타남

- 전체 : 2012년 말의 조사에서는 성장(51.2%)과 분배(48.8%)에 대한 요구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6년에는 ‘분배’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남
 -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 어디에 정책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12년 말에는 성장과 분배가 각각 51.2%, 48.8%였으나 2016년에는 각각 44.1%, 55.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배’의 선호도가 높아짐
 - 성장이 분배를 낳는다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가 줄어든 반면 분배가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이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⁵⁾
- 연령별 : 50대 이상의 경우 ‘분배’ 선호도가 43.9%로서 과반에 미달하는 등 여전히 성장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2013년(28.1%)보다 ‘분배’ 요구가 크게 증가
 - 은퇴 준비가 부족(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하고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보수적인 ‘50대 이상’의 경우에도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성별 : 분배에 대한 요구는 여성(59.8%)이 남성(52.2%)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반영함

< 성장-분배 중 분배 선호도 >



< 분배 선호도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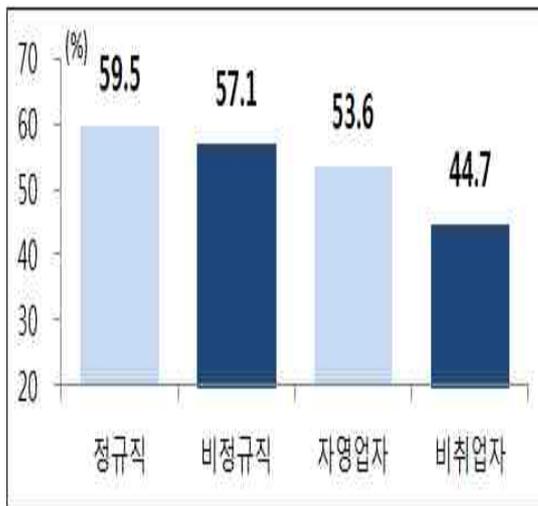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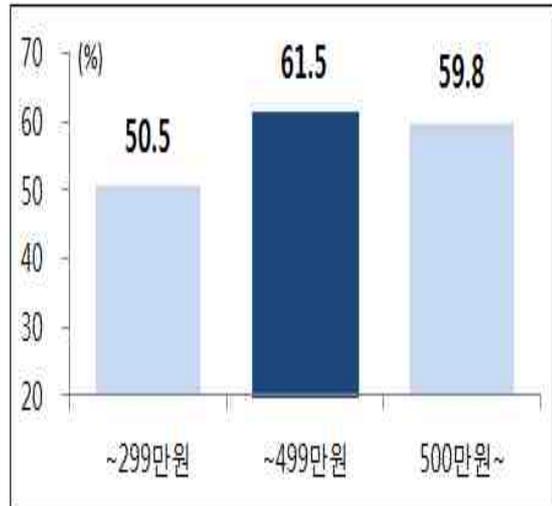
5) OECD, IMF.

- **직업별** : 자영업자의 경우 '분배'를 '성장'에 비해 우선순위에 뒤야 한다는 응답률이 53.6%로서 2012년 말의 42.9%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이는 2013~2016년에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골목상권 보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분배' 관련 정책에의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소득별** : 300~499만원 '중소득층'의 경우 분배를 정책우선순위에 뒤야 한다는 응답률이 61.5%로서 2012년 말의 50.0%에 비해 크게 증가
 - 비교적 학력이 높고 사회경제적 이슈에 민감한 중산층에서 분배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

< 분배 선호도 : 직업별 >



< 분배 선호도 : 소득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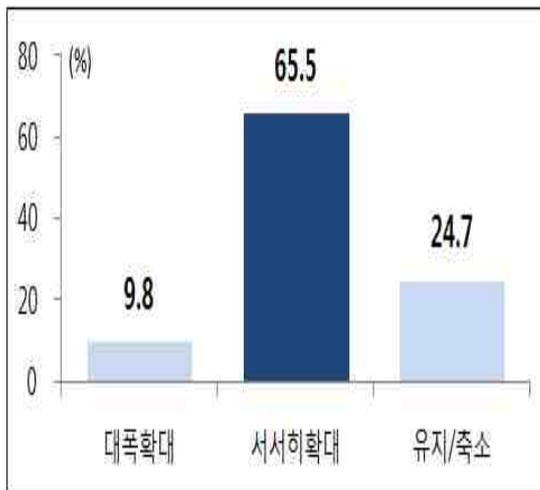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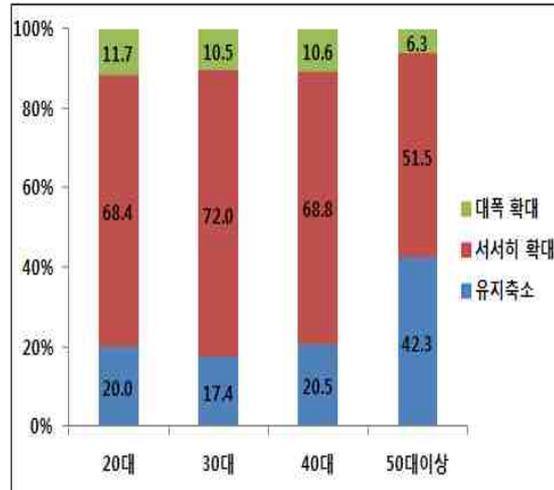
- ④ (복지) 복지를 '서서히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2β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4명 중 1명 정도였음
- **전체**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5.5%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4.7%,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9.8%에 그침
 - "보육, 등록금, 의료 등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65.5%로 가장 많았으나 2012년 말(75.9%)보다 감소
 - 반면 '복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4.7%로서 두

- 번째로 많았으며, 2012년 말(13.0%)에 비하면 증가
- 국민들은 현재 경제정책이 성장에 치우쳐 있어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복지를 대폭 늘리기 보다는 서서히 늘리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 **연령별** : 50대 이상의 경우 복지를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42.3%에 달해, 평균(24.7%)보다 크게 높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크게 높았음
- 20대의 경우 '유지/축소' 의견은 20.0%로 낮은 편이지만, 2012년 말(10.8%)에 비하면 크게 증가함

< 복지 확대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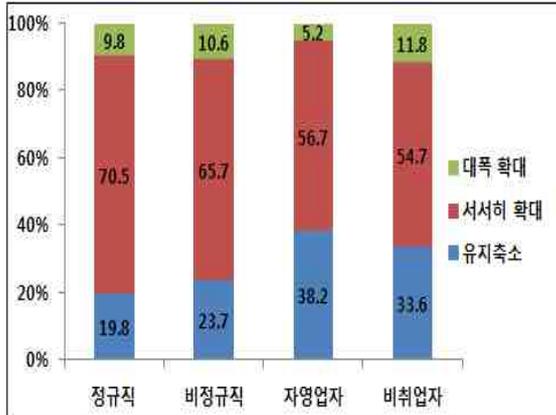
< 연령별 '복지 확대'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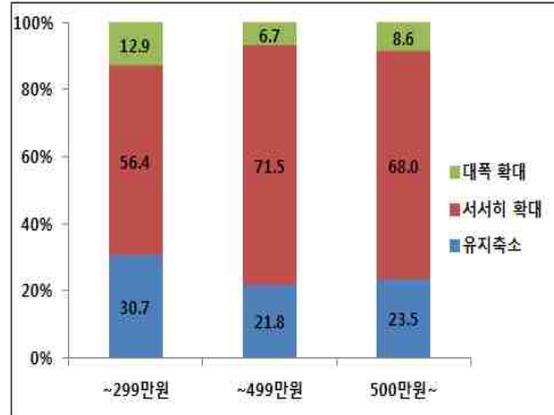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직업별** : 자영업자의 경우 복지를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38.2%로 높았으며, 비취업자도 33.6%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 이는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을 받아 '복지'나 '분배'에 대한 요구 역시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을 반영함
- **소득별** :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 복지를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30.7%로 가장 높았으며, 2012년 말(12.2%)에 비하면 크게 증가함
- 저소득층의 경우, 경기침체와 소득감소 등의 영향으로 '복지'나 '분배'에 대한 요구보다는 '성장'과 '경기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더 커졌음을 보여줌

< 직업별 '복지 확대'에 대한 의견 >



< 소득별 '복지 확대'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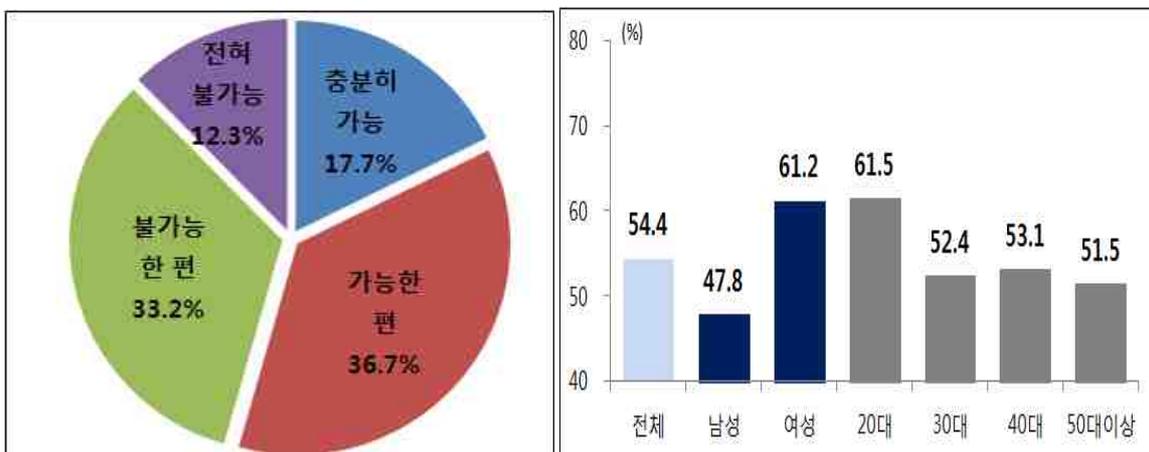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⑤ (재원조달 가능성) 국민의 과반(54.4%)은 증세 없이 기존의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해서 추가 복지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고 응답

- 전체 : “추가 복지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증세 없이 기존의 예산을 아끼고 세제를 개편해서 조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가능하다는 응답이 54.4%로서 과반을 넘김
 - ‘충분히 가능’하다는 응답이 17.7%, ‘가능한 편’이라는 응답이 36.7%에 달함
 - 국민들은 정부의 예산 낭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증세보다는 예산 효율화 및 세원 확대, 탈세 방지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선호함

<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 가능성 > <증세 없이 재원조달 가능: 성별/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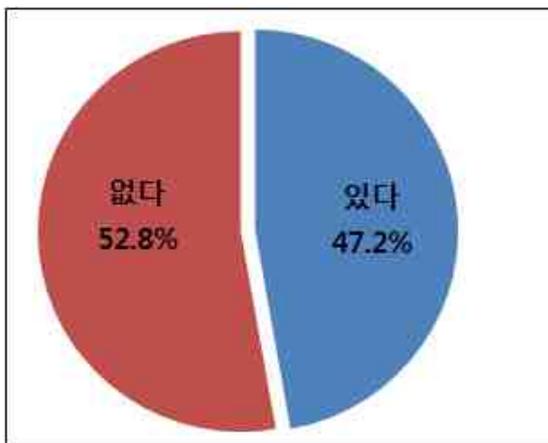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성별** : 증세 없이 복지 자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응답률이 남성은 47.8%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61.2%로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증세 없는 복지 자원 조달' 가능하다는 응답이 2012년 말 (56.3%)에 비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저성장의 지속으로 세입 감소와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증세 없는 복지 자원 조달'의 자신감이 감소했다고 판단됨
- **연령별** :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증세 없는 복지 자원 조달' 가능하다는 응답이 61.5%로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연령층은 50%대 초반으로 비슷함
 - 20대는 경제활동의 경험과 경제적 부담감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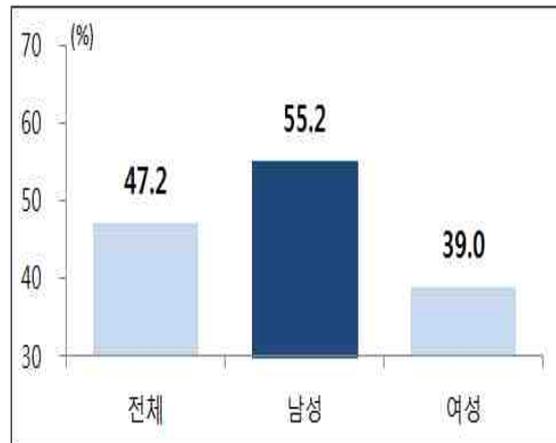
⑥ (복지 위한 증세)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의견은 절반 수준

- **전체**: “귀하는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7.2%로서 절반에 못 미쳤으며, **2012년 말의 51.0%에 비하면 소폭 감소함**
 - 최근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득과 경제적 여유가 감소한 것이 '증세 의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성별** :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47.2%)에 대해, 남성은 55.2%로서 과반 이상이 긍정적인 반면 여성은 39.0%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함

< 복지 위한 증세 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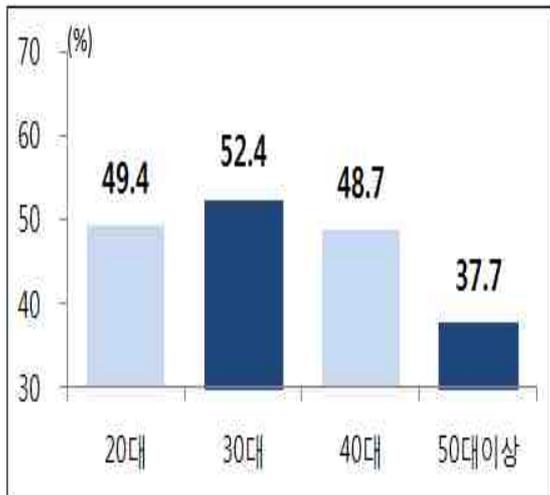
< 복지 위한 증세 의향 : 성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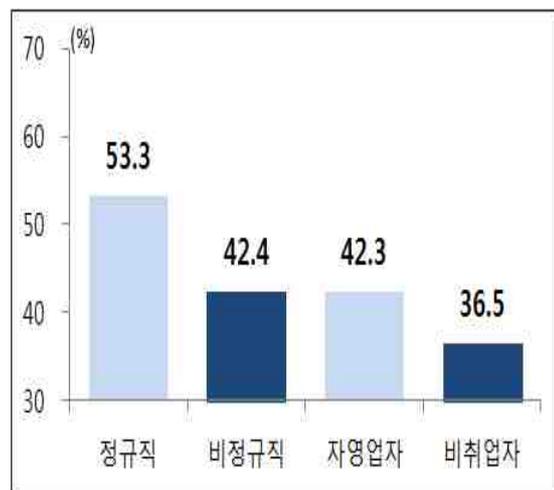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연령별** :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증세 의향은 '30대'(52.4%)가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37.7%)이 가장 낮았음
 -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의 경우 노후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추가 증세'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더 있으며, '복지'에 대해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을 반영함
- **직업별** :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증세 의향은 정규직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42.3%, 비취업자는 36.5%에 불과함
 -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더 있는 '정규직'의 경우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비취업자의 경우 가장 부정적이었음

< 복지 위한 증세 의향 : 연령별 >



< 복지 위한 증세 의향 : 직업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 **소득별** :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증세 의향은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51.9%로 가장 높았으며, '300~499만원'의 중소득층은 48.5%, '299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41.1%로 가장 낮았음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여유가 더 있고, '복지를 위한 추가 증세'에 대해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음

3. 시사점

- 국민들이 제20대 국회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제' 정책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아울러, '분배'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54%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증세'를 하기 보다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숨어 있는 '세원의 발굴' 등에 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
 - 복지를 위한 증세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7%로서 아직 과반에 미달하고 있으며, 북유럽 복지국가(70% 이상)에 비하면 크게 낮은 편이어서, 증세를 위한 여건이 호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경우에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겪고 있는 고용 불안과 노후 준비 부족을 드러냄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와 '비취업자'의 경우에 '경제'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 직업군이 고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50대 이상' 중·고령층과 '자영업자', '비취업자',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
- 복지 체험을 늘림으로써 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복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과 재정 건전성 유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함

김동열 정책조사실장 (02-2072-6213, dykim@hri.co.kr)